

문 대통령, 아세안과 손잡고 北과 대화 시도

꼭 막혔던 남북관계 해소 '관심사'

문재인 대통령(사진)이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정상회의 또는 같은 달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하길 바란다는 의사를 표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아세안 국가들을 소용 창구로 삼아 꼭 막혔던 남북 관계를 풀 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문 대통령은 지난 30일 태국 방콕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또는 방콕 EAS 정상회의에 초청해야 한다고 보는가 라는 질문을 받고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 김정은 위원장이 함께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매우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 "방콕 EAS 정상회의에서는 동아시아 국가들과 북한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협력할 수 있을지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는 아세안 10개 회원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이 모두 참여한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회의에서 김 위원장

을 초청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는 이같은 제안을 바탕으로 김 위원장을 공식 초청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에 앞서 11월 초 방콕에 열리는 EAS 정상회의에 김 위원장이 참여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EAS는 아세안 10개 국가에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미국, 러시아 등이 참여하는 형태다. 북핵 관련 당사국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셈이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9월 1~3일 태국 방콕 때 김 위원장의 초청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김 위원장에게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우리의 제의에 응하지 않았다. 지난 6월30일 판문점 남북미 회담으로 남북·북미 관계가 개선될 조짐을 보이기도 했지만, 이후 상황은 오히려 악화됐다.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며 지난 7월 25일 이후 한 달 동안 9차례나 단거리 미사일·발사체를 발사했고 우리 측을 향해 '막



"11월 한·아세안 회의에 김정은 오면 의미 있을 것" 6·30 남북미 회동 이후 첫 남북정상 만남 가능성 아세안, 남북 모두와 외교 관계... 소통창구 역할 기대

말' 수준의 담화도 발표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한미 연합훈련이 끝난 만큼 남북·북미 관계도 다시 대화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과거에도 북한은 실질적인 협상이나 대화의 자리가 마련되기 전에는 그렇게 긴장을 끌어올려 왔다"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재래식 전력을 보강해 비핵화 이후를 대비하려는 성격일 수 있다. 북한이 비핵화 대화를 재개할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등장 무대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방콕 EAS를 언급한 것은 아세안 국가들이 남북 관계의 소통 창구로 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 국제 사회에 존재감을 알린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은 모두 동남아시아(싱가포르, 베트남)에서 열렸다. 또 아세안 국가들은 남북과 모두 외교 관계를 맺고 있기도 하

다. 아세안 10개 회원국 등 모두 27개국이 참여하는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은 북한이 참여하고 있는 유일한 지역 안보 협의체다.

또 문 대통령은 최근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 사이의 철도를 이어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교량국가'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을 연계한 것이다. 북한이 비핵화에 나설 경우 아세안 국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경제 번영을 도모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셈이다.

김 위원장이 북한의 최고지도자라는 지위를 확고하게 보장받은 점도 향후 국제무대 복귀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

북한은 지난 29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무위원장직과 대의원의 지위를 분리함으로써 국무위원장의 위상을 더 공고히 했다. 또 국무위원장에 외교대표의 임명·소환 권한을 부여해 대외적인 대표성도 보장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외교대표의 임명 및 소환 권한을 국무위원회 위원장에게 부여한 것은 김 위원장이 외교 분야에 큰 관심을 갖고 개입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준 것"이라며 "향후 김 위원장의 공개 활동에서 외교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청와대는 한·아세안 정상회의 등 국제 외교 무대에 김 위원장을 초청하는 문제는 북미 대화의 진전 속도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판문점 남북미 회동에서 북미가 약속했던 비핵화 실무 협상에 어느 정도 진전이 생겼는지 남북 관계 개선과 경제 협력 문제를 논의할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초청 문제는 북미 간 대화를 포함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 상황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핵 대신 경제 발전을 택함으로써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것이 김 위원장 스스로 밝힌 의지"라며 "북한이 비핵화를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북한이 핵을 버리고 경제협력으로 모두와 함께할 수 있도록 아세안이 많은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시스

민주당 이춘석 의원

국립익산박물관 현장 시찰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기재위)은 지난 30일 국립익산박물관 신관 공사현장을 찾아 진행상황을 살피고 남은 공사로도 조속히 추진할 것을 독려했다.

이번 공사는 도입이었던 미륵사지 유물전시관을 국립으로 승격함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이 의원이 초선 때부터 심혈을 기울여 2014년 예정위 간사 재임 시 각 부처와의 담판 끝에 결실을 맺은 사업이다.

도립 전시관이 국립으로 승격된 사례는 전국 최초로서 이 논의가 시작됐을 때만해도 각 부처의 반대가 매우 심했기 때문에 이것이 관철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내년 1월 초 개관하게 될 국립익산박물관은 4개의 전시실(2255㎡)을 통해 선사시대부터 근대까지 출토된 약 4000여 점의 유물을 상설 전시하고 다양한 특별전을 개최하여 백제 왕도 익산 문화권의 우수성을 알릴 예정이다. 이춘석 의원은 "남은 공事も 잘 마무리해서 국립익산박물관이 우리 전북과 익산의 역사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창간기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국회 기재위원장으로서는 물심양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김수홍 국회 사무차장 퇴임

김수홍 국회 사무차장이 지난 30일 퇴임식을 가지고 30년간 국회 공직생활을 마무리했다.

김 사무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사무처가 무려 11년만에 공무원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며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노사가 하나 되어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마지막 숙제를 완수할 수 있게 돼 떠나는 마음이 한결 가볍다"고 밝혔다.

국회 사무처는 29일 국회 내 공무원 노동조합과 정당한 조합활동 보장, 공무원 노조원 근로조건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의 내용이 담긴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김 사무차장은 국회사무처 대표로 단체 교섭을 이끌어왔다.

후임으로는 김승기 전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임명됐다. /뉴시스



가능한국민 시상식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30일 인천 송도에 위치한 이너트론을 방문해 이달의 가능한국민 시상식을 한 뒤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표현의 자유 침해 없게 가짜뉴스 대책 마련”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

한상혁 방통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30일 “국회에 발의된 법안과 국민 여론을 고려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짜뉴스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가짜뉴스와 관련된 대책과 관련해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 여러 건 있는 것으로 안다. 가짜뉴스의 정의, 판단 기준, 대책까지 상세한 내용을 법안에 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방통위가 직접적으로 콘텐츠 내용에 대해서 규제할 권한은 없다”고 재차 강조하며 “최근 공부하는 과정에서 유럽 집행위원회에서 실천 강령 준수를 약속하면 규범력이 생긴다고 여겨지고 그런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통위가 직접적으로 콘텐츠 내용을 심사하거나 규제하는 것은 현행법상 어려운 일로 파악하고 있다. 내용 심의와 심의에 따른 처벌은 방통통신심의위원회의 권한”이라며 “다만 방통위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방통위가 고민하고 대안을 내놓은 의무는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JJC전북

YouTube KakaoTV NAVERTV DOLM NAVER 전북뉴스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본사: http://www.jjctv.co.kr Tel 02-2057-0011 Fax 02-2057-002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09 롯데캐슬프리저던트 23F
 JJC전북총국: http://jjctv063.co.kr Tel 063-246-0885 Fax 063-286-0887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 5층